

한나라 안상수 원내대표 의미와 향후 정국

# 여야 '強大強' ... 충돌 불보듯

## 친이계 세결집... 당내 갈등 깊어질 가능성

## 강성 여당 탄생... 내달 '입법전쟁' 재연 예고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에 주류의 안상수 의원이 선출된 데는 막판 친이계의 세 결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의 화합을 모토로 내세운 '황우여-최경환'조의 패배로 당내 분란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승리의 원인은=중립 성향의 황우여 의원이 '당 화합'을 표방하며 친박계 최경환 의원과 동반 출마를 선언하자 원내대표 경선 분위기는 심하게 요동쳤다. 그동안 1위를 달리던 '안상수-김성조'조의 기반이 흔들린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주류의 '반작용'을 불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상 '최경환 카드'를 용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이계 내부의 위기감이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친이계우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의 결집을 부른 것이다.

◇당내 갈등은 깊어질 듯=안 의원이

안승했지만 당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 원내대표가 17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진영에 서운했다. 친이계 모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친박 측과 이해의 간극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무성 원내대표론' 무산 이후 안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 자체가 화합론보다는 국정은 주류가 책임진다는 '주류 책임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계파 갈등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물론 안 의원은 "당 화합을 위해 모든 인사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탐광력 쓸 것"이라고 말하며 화합을 강조했다. 또 친박 성향의 김성조 신임 정책위의장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여당으로 가나=4·29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안팎에서는 '한나라당 무기력증'에 대한 처절한 자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친이계 핵심 중진의원이나 '강경'으로 분류되는 안상수 원내대표 선출은 '국정주도권을 회복하는 강한 여당으로의 재탄생'이라는 소속 의원들의 바람이 응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협상의 파트너가 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만큼 일종의 여야간 '강(強) 대 강(強)'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첫 시험대는 6월 임시국회다. 언론 관계법과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지난 연말 연초 '입법 전쟁'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정·청 관계는=경선에 나선 3명의 원내대표 후보 모두 당·정·청 관계를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점에서 여당의 역할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신임 원내대표는 이미 "정부정책에 대해 '노(No)'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노'라고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부의 청부입법, 당정협의 없는 정부의 입장 발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한 재선 의원은 "당·정이 제대로 소통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내지도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설득·타협으로 대화 이끌겠다"

##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는 21일 강성이미지와 관련, "충돌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설득과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성이란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 원칙주의자라고 쓰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강래 대표에 대해 "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서로 윈윈하

면 법안도 설득과 타협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법을 여론조사로 만드는 나라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원은 필요 없고 여론조사 기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여론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과 인사차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당내 화합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나 부평에 당선 가능성이 크고 지역기반이 강한 사람들을 내보지 못하는 등 공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쇠신위 활동과 관련, "쇠신위가 당내기구가기 때문에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거기서 좋은 안 들어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회의를 거쳐 의총에서 의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미디어법 강행때 실력 저지 불사"

## 재보선 '해당행위자' 징계 착수... 내부 갈등 우려

## 민주당 제주서 신임 원내대표단 워크숍

민주당 지도부가 미디어 관련법 처리 등 '3차 입법전쟁'이 예상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신임 원내대표단과 워크숍을 갖고 전열정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정동영, 신건 의원 등 무소속 후보를 도운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내부 갈등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갖고 6월 국회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의 '화약고'로 떠오른 미디어법 처리 방향과 관련,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수렴 없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개성공단 사태 등을 고리로 남북문제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하는 등 대외공세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서울에서 전체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막판 대외 준비에 나선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정동영, 신건 의원을 도운 당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단일대우 형성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해당 행위'를 한 당내 인사에 대한 재증작업을 진행,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해당 행위자로 조사중인 당원은 30여명으로 민주당은 빠르면 25일께 최고위원회에 해당 행위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보고한 뒤 징계 처분을 위해 윤리위로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역언론의 역할' 토론회 참석

민주당 정세균 대표(우측에서 두번째)가 21일 오후 청주시 가경동 청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지역발전과 지역언론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 DJ "북미대화 기틀에 재개" DY "개성공단 철수 안돼" 박지원 '盧 선처' 서명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21일 "미국이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살게 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권이 자리를 잡으면 올 가을부터 북미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외국어대학에서 열린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강연에서 "중국과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자신도 핵이 근본 목적은 아니다. 북한도 안전과 경제적 보장만 해주면 핵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 악화의 현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햇볕정책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소속 정동영 의원(전주 덕진·DY)은 21일 호남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사)21세기 여성발전위원회 '제8회 국민모범인상' 시상식에 참석 "개성공단을 더 발전시켜야 분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철수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책상에서 쓰는 통일방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업과 인력이 대거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부시정권을 포용하는 자세를 취했다"며 "그동안 해왔던 비판과 분노의 정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고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위해 당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지금까지 국익과 국가가 미지를 위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하고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어제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5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실시된 대북 송금 특검으로 육고를 치른 '악연' 때문에 노 전 대통령과는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던 게 사실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scale of justice and text promoting the program. The text includes '국립학점' and '국립학점'.